

2008 새해 달라지는 것

일반 국민 배심원으로 재판 참여... 학교 급식비도 소득공제 아이 낳으면 아빠도 3일 출산휴가... 제헌절 공휴일 제외

▣ 부동산·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고용해야

▶지역우선 분양 1년 이상 거주=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.

▶재건축·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= 재건축·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된 중전 5분의 4(80%)에서 4분의 3(75%)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.

▶주상복합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= 4월 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고,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.

▶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=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.

▶유통할증제 시행= 고유가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객·화물 항공운임에 대해 유통할증이 시행된다. 이에 따라 장거리 왕복 요금은 10만원, 단거리 왕복 항공료는 4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.

▶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=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할인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.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할인은 5%다.

▶1,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은 지금까지 800cc 이하 경차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이 1,0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된다.

▣ 금융·보험·증권 - 은행서도 자동차·생명보험 판매

▶전자금융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= 4월부터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 등의 보안등급을 1~3등급으로 나눠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. 1,000만원 이상 고액 이체에만 적용된다.

▶연결공시제도 시행=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.

▶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통지방법 개선=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며,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 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.

▶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=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. 다만, 국회에서 시행 시기 연기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.

▶생명보험·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=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(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)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.

▶홀클리 운용목표제 폐지= 1999년부터 시행해 온 홀클리 목표제가 폐지되고, 3월부터 7월말 환매 조건부채권(RP) 금리 기준의 '한은 기준금리제'가 도입된다.

▶증권사 대주주 규제 강화= 증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19일부터 증권사 대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·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▣법무 - 형적부,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
▶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=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해 재판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다.

▶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=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부 대신 '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'가 시행된다.

▶혈의이혼 때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= 미성년 자녀 양육방안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이혼이 불가능해지고, 이혼숙려제가 도입된다.

▶일반인의 소송기록 열람제 시행= 사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확정된 소송기록을 학술연구, 권리구제 등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.

▶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= 노무인력 등으로 5년 이상 일해 일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(연 2,900만원)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.

▶특정 성폭력 사범 위치추적제도 시행= 상습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해 24시간 휴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.

▣농림·해양 - 모든 한우·육우 이력추적제 시행
▶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=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. 등록제는 농지, 축산 현황 등 농가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.

▶최고가이력추적제 전국 확대= 부분 시행 중인 최고가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. 소 출생 및 이동 신고, 귀포 부착 등이 의무화해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최고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.

▶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= 6월부터 10만㎡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▣세제 -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%로... 출산·입양 200만원 공제

▶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=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, 복지장부 비치·신고,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% 초과 신고하는 성실 사업자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.

▶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= 1월 1일 이후 현행 소득금액의 10%에서 15%로 확대되며, 2010년부터는 20%로 늘어난다. 단, 종교단체 기부금은 10%가 유지되며,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출금액에도 적용된다.

▶초·중·고 자녀교육비 공제범위 확대=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, 학교급식비,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.

▶출산·입양 소득공제 신설= 1월 1일부터 출

생·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.

▶경차 범위 확대=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cc에서 1,000cc로 확대한다.

▶등유세를 인하= 등유세율을 1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.

▶소비자단체 소송 시행=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시행된다.

▶휴먼에듀관리재단 설립= 1분기부터 휴먼에듀를 이용, 저소득층 창업·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및 복지사업이 시행된다.

▶외환송금 때 제출서류 간소화=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(건당 1,000달러 이상만 합산)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.

▣산업·정보통신 - 놀이시설 설치검사 받아야... 인터넷TV 실시간 방송

▶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= 1월부터 등유 1당 23원, 부생연료유 1당 17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.

▶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신설=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설할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시설은 4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▶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=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. 현재 인터넷화를 사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인 070 번호를 새로 받아야 한다.

▶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 요금 인하= 이동통신 3사가 1월 1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 이용료를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일제히 내린다.

▶휴대폰 보조금 규제 철폐=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3월 27일 사라져, 업체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

▶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=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시기를 1분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, 1월 1일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된다. 일시 납부하면 전파사용료를 10% 감면 받는다.

▶인터넷TV 실시간 방송 허용= 내년 중 인터넷TV를 통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이 허용된다. 따라서 인터넷TV를 통해서도 케이블TV처럼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.

▣교육·노동 - 100~299인 사업장도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
▶수석교사제 시범실시= 3월부터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우수한 교사에게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된다.

▶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필요한 시험이 8월 처음 시행된다.

▶교직원 육아휴직 연장 확대= 육아휴직 연장 기간을 만 6세로 확대한다.

▶영재학급 확대= 2012년까지 영재학급을 800개로 점차 확대한다.

▶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= 비정규

직 보호법 적용 대상이 7월 1일부터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~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.

▶아빠 출산휴가제 시행=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남편에게도 3일간 휴가가 주어진다.

▶육아휴직제도 개선=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3세 미만(기존 1세 미만)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, 휴직 기간은 1년 내에서 2차례 나눠 쓸 수 있다.

▶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= 육아휴직 대신 주당 근무시간을 15~30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다.

▶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=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,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.

▣일반행정 -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가능

▶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= 전국 읍·면·동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, 수령기관은 주민등록지·신청지 중 선택할 수 있다.

▶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시행= 폐쇄회로(CC)TV 설치 때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,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도입한다.

▶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= 공공기관이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.

▶육외광고물 책임 강화= 허가신고 대상 육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, 제작자명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다.

▶재산세 공과세 도입=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를 공과 과세한 후 자치구에 교부한다.

▶지방세 지원범위 확대= 재산세 분담세액을 500만원으로 조정하고, 1,000cc 이하 경차의 취득·등록세를 50% 감감한다.

▶제헌절 공휴일 제외=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.

▣문화·여성·가족 - 집으로 찾아가는 '아이 돌보미' 전국 65곳으로 확대

▶저차량 단순 집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= 청소년 등 단순 저차량 집해자가 과도한 고소·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한 저차량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한다.

▶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=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.

▶명동 예술극장(옛 명동 국립극장) 개관=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'명동 예술극장'이 10월 문을 연다.

▶여성가족부 가족화인인증제 도입= 6월 시행 예정인 법에 따라 모범적인 가족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을 포상한다.

▶'아이 돌보미' 사업 확대=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'돌보미'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을 전국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.

▣환경·교통 - 민간건전지 분리수거

▶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= 7월부터 국제기준(GHS)에 따라 유독물 분류 및 표시를 시행한다.

▶수렵동물 확인 부착제= 5월부터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 수렵자가 직접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.

▶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= 1월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 등의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.

▶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 확대= 7월부터 노래연습장,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을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으로 신규 적용한다.

▶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= 1월부터 비소, 납, 도금업소의 총질소에 대한 폐수배출기준을 강화한다.

▶폐기물부담금제 개선= 1월부터 1회용 기저귀 개당 부담금이 1.2원에서 5.5원으로 늘어난다.

▶폐기물 수출입 신고제= 8월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 수출입도 신고해야 한다.

▶전자류 분리수거= 1월부터 가정에서 쓰는 망간건전지, 알칼리망간건전지 등을 분리 수거해야 한다.

▣보건·복지 - 직장인 건강료 5.08%로 인상

▶건강보험 보험료 인상=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4.77%에서 5.08%로 인상된다.

▶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= 임원환자 식대(50%)와 6세 미만 임원아동(10%)의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, 장애인 급여를 폐지한다.

▶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= 40년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평균 소득의 60%에서 50%로 인하고, 2009년부터 2028년까지는 40%로 점차 인하한다.

▶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시행= 1월부터 70세 이상,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60%에 대해 월평균 8만4,000원을 지급한다.

▣국방·병무·보훈 - 軍 복무중 대학 학점취득 가능

▶현역병 등 복무기간 점진 단축= 내년 초 입대 육군은 복무기간이 36일 단축돼 약 23개월 복무하게 된다.

▶유급지원병제 도입·시행= 전문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인력 2,000명을 선발한다.

▶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= 자녀 있는 기혼자는 과거 방위병처럼 출·퇴근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.

▶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= 1월 1일부터 독립기념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

▶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=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최대 7%,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최대 18.2% 인상된다.

▶고엽제환자·후유의증환자 지원 강화= 고엽제환자와 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적용이 5년 더 연장된다.

▶동원훈련 단체 임용자 이동 여부 2,000원 지급= 거주지에서 집결지까지 교통비 2,000원을 지급한다.

▶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가능= 군내에서 대학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.

▶군인 육아휴직 확대= 여군 육아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.

▶군인·군무원 봉급·수당 인상= 병사 봉급이 10% 올라 상병의 경우 월 8만8,000원을 받는다.

▶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= 지역사단 단위 자체 발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유해발굴사업을 확대한다.

근 하 신 년

평소 우정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
항상 고객여러분께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포천우체국장 서영호

영업과장 오호택 우편물류과장 김영주 경영지도실장 정숙자

- 포천송우우체국장 유효현
- 포천영북우체국장 심재열
- 포천일동우체국장 박종화
- 포천가산우체국장 유영진
- 포천내촌우체국장 조백연
- 포천관인우체국장 유경조
- 105군사우체국장 이종국
- 포천군내우체국장 박양희
- 포천신북우체국장 이승우
- 포천창수우체국장 정홍섭
- 포천영중우체국장 이병국
- 포천이동우체국장 김주섭

우리 포천우체국 전 직원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서비스현장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.

언제나 든든한 우체국금융 에버리치(EVERRICH)

